

심판해야 할 후보, 우리 지역구엔 누가 있을까?

편집팀

시민단체들이 선정한 19대 총선 심판 후보, 우리 지역구엔 누가 있을까요?
『참여사회』가 정리해 드립니다.

어떻게 보나요?



한미FTA 비준 책임

이 후보는 아래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합니다.

- 한미FTA 비준안 날치기 처리에 가담하여 찬성 표결을 한 151명의 여야 국회의원
- 본회의의 날치기 처리 의사 일정을 진행한 국회의장과 부의장
- 야당 의원 중 한나라당의 날치기 처리에 명분과 빌미를 제공한 (구)민주당 합의비준파 주도 의원, 당론 변경을 시도한 의원

2012년 2월 17일,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에서 발표한 명단입니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http://www.nofta.or.kr>



4대강 사업 찬동

이 후보는 4대강 사업을 통해 홍수와 가뭄 등 각종 피해를 막을 수 있고, 환경을 살리며, 일자리 수십 만개를 창출해 경제도 살릴 수 있다는 등 정부의 주장에 부화뇌동해 찬동 발언을 일삼았습니다.

2012년 3월 21일 4대강되찾기연석회의에서 발표한 명단입니다.



언론악법 날치기

이 후보는 아래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합니다.

- 조중동 방송 출현에 책임이 있는 '조중동 방송 10적'
- 언론악법 날치기 인사
- KBS 수신료 인상 논의 및 미디어랩법 처리 과정에서 (구)한나라당과 야합한 (구)민주당 의원

2012년 2월 20일 조중동방송저지네트워크에서 발표한 명단입니다.

조중동방송저지네트워크 <http://nocjdtv.tistory.com>



역사교과서 개악 주도

이 후보는 '좌파 척출'이라는 색깔론 잣대로 민주주의 역주행을 주도하였습니다. 또한 과거사 규명 활동을 축소하고 친일·독재를 미화하였으며 역사교과서 개악을 주도하였습니다.

2012년 3월 5일 역사정의실천연대에서 발표한 명단입니다.

역사정의실천연대 <http://cafe.daum.net/historyact2012>



공권력 남용+책임회피

이 후보(새누리당 허준영, 서울 노원 병)는 경찰 청장으로 재직하던 2005년 11월, 한미FTA와 쌀개방 협상에 반대하는 농민대회에서 농민 2명이 경찰의 공권력 남용으로 사망하였으나 책임 회피로 일관하였습니다. 철도공사 사장 재임 시 대규모 인력 감축과 외주 하청으로 철도 사고가 빈발하게 된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2012년 3월 19일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철도노동조합에서 발표한 명단입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http://www.ijunnong.net>

전국철도노동조합 <http://krwu.nodong.net>



용산참사 책임자

이 후보(무소속 김석기, 경북 경주)는 서울경찰 청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1월, 경찰 스스로 만든 '집회·시위현장 법 집행 매뉴얼'을 무시하고 용산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특공대 강제 진압을 최종 승인하였습니다. 당시 특공대원들이 현장 상황에 대해 제대로 된 정보를 접하지 못한 상태에서 과잉 진압을 조장한 셈입니다.

2012년 3월21일 재개발행정개혁포럼에서 발표한 명단입니다.



친환경무상급식 반대

이 후보는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친환경무상급식 실시를 반대하였습니다. 또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친환경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강행을 적극 옹호하고 지원하였습니다.

2012년 3월 22일,

친환경무상급식푸들국민연대에서 발표한 명단입니다.

친환경무상급식푸들국민연대 <http://www.happybob.net>



핵무장+원전 확대 주장

이 후보는 17대, 18대 국회에서 핵발전 산업을 지지하여 재처리와 핵무장을 하자는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심지어 일본 후쿠시마 핵 재앙 이후에도 원전 확대와 핵무장을 주장하였습니다.

2012년 2월 28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에서 발표한 명단입니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http://cafe.daum.net/nukefree>



정교분리 위배

이 후보는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 원칙에 반하는 행위와 발언을 하였습니다.

2012년 2월 20일 정교분리헌법준수네트워크에서 발표한 명단입니다.

서울

명단은 지역구 순으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나의 지역구 의원을 찾아보세요!

심판 대상	지역구	정당	심판 사유
김종훈	강남 을	새누리당	
정옥임	강동 을	새누리당	   
정양석	강북 갑	새누리당	 
구상찬	강서 갑	새누리당	
김성태	강서 을	새누리당	
김성식	관악 갑	무소속	
이범래	구로 갑	새누리당	  
허준영	노원 병	새누리당	
권영진	노원 을	새누리당	  
김선동	도봉 을	새누리당	 
홍준표	동대문 을	새누리당	  
서장은	동작 갑	새누리당	
정몽준	동작 을	새누리당	   
강용석	마포 을	무소속	 
김성동	마포 을	새누리당	
이성현	서대문 갑	새누리당	 
정두언	서대문 을	새누리당	   
김동성	성동 을	새누리당	 
정태근	성북 갑	무소속	
김을동	송파 병	새누리당	
유일호	송파 을	새누리당	 
김용태	양천 을	새누리당	
권영세	영등포 을	새누리당	 
진 영	용산	새누리당	
이재오	은평 을	새누리당	
홍사덕	종로	새누리당	
정진석	중구	새누리당	
김 정	중랑 갑	새누리당	
유정현	중랑 갑	무소속	 

진성호	증량 을	무소속	FTA	
-----	------	-----	-----	--

경기

명단은 지역구 순으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나의 지역구 의원을 찾아보세요!

심판 대상	지역구	정당	심판 사유
손범규	고양 덕양 갑	새누리당	FTA
김태원	고양 덕양 을	새누리당	FTA
김영선	고양 일산서구	새누리당	FTA
전재희	광명 을	새누리당	FTA
노철래	광주	새누리당	FTA
주광덕	구리	새누리당	FTA
유정복	김포	새누리당	FTA
송영선	남양주 갑	새누리당	FTA
차명진	부천 소사	새누리당	FTA
임해규	부천 원미 갑	새누리당	
손숙미	부천 원미 을	새누리당	FTA
신영수	성남 수정구	새누리당	FTA
신상진	성남 중원	새누리당	FTA
남경필	수원 병	새누리당	FTA
배은희	수원 을	새누리당	FTA
정미경	수원 을	무소속	FTA
김진표	수원 정	민주통합당	FTA
박순자	안산 단원 을	새누리당	FTA
김영환	안산 상록 을	민주통합당	
김학용	안성	새누리당	FTA
심재철	안양 동안 을	새누리당	FTA
정병국	여주 양평 가평	새누리당	
한선교	용인병	새누리당	FTA
황진하	파주	새누리당	FTA
원유철	평택 갑	새누리당	FTA
김영우	포천 연천	새누리당	FTA

경남

명단은 지역구 순으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나의 지역구 의원을 찾아보세요!

심판 대상	지역구	정당	심판 사유
김정권	김해 갑	새누리당	   
김태호	김해 을	새누리당	 
조해진	밀양 창녕	새누리당	  
여상규	사천 남해 하동	새누리당	
신성범	산청 함양 거창	새누리당	
최구식	진주 갑	무소속	 
김재경	진주 을	새누리당	  
이주영	창원 마산합포	새누리당	  
안홍준	창원 마산회원	새누리당	 
이군현	통영 고성	새누리당	

경북

명단은 지역구 순으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나의 지역구 의원을 찾아보세요!

심판 대상	지역구	정당	심판 사유
최경환	경산 청도	새누리당	  
김석기	경주	무소속	
정수성	경주	새누리당	
김성조	구미 갑	무소속	  
김태환	구미 을	새누리당	 
이철우	김천	새누리당	 
이한성	문경 예천	새누리당	  
신현국	문경 예천	무소속	
성윤환	상주	무소속	
김광림	안동	새누리당	  
강석호	영양 영덕 봉화 울진	새누리당	 
장윤석	영주	새누리당	 
정희수	영천	새누리당	 
정장식	포항 남구 울릉	무소속	
이병석	포항 북구	새누리당	   

인천

명단은 지역구 순으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나의 지역구 의원을 찾아보세요!

심판 대상	지역구	정당	심판 사유
이상권	계양 을	새누리당	FTA
홍일표	남구 갑	새누리당	FTA 
윤상현	남구 을	새누리당	FTA 
이운성	남동 갑	무소속	FTA 
이학재	서구 강화 갑	새누리당	FTA 
황우여	연수	새누리당	FTA  +
박상은	중구 동구 옹진	새누리당	FTA 

대구

명단은 지역구 순으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나의 지역구 의원을 찾아보세요!

심판 대상	지역구	정당	심판 사유
조원진	달서 병	새누리당	FTA  
유승민	동구 을	새누리당	FTA
이명규	북구 갑	무소속	FTA 
서상기	북구 을	새누리당	FTA 
이한구	수성 갑	새누리당	FTA 
주호영	수성 을	새누리당	FTA   
김희국	중구 남구	새누리당	
배영식	중구 남구	무소속	FTA 

울산

명단은 지역구 순으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나의 지역구 의원을 찾아보세요!

심판 대상	지역구	정당	심판 사유
김기현	남구 을	새누리당	FTA 
안효대	동구	새누리당	FTA 
강길부	울주	새누리당	FTA 
정갑윤	중구	새누리당	FTA   

부산

명단은 지역구 순으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나의 지역구 의원을 찾아보세요!

심판 대상	지역구	정당	심판 사유
김정훈	남구 갑	새누리당	FTA  
이진복	동래	새누리당	FTA 
박민식	북구 강서 갑	새누리당	FTA  
유기준	서구	새누리당	FTA
유재중	수영	새누리당	FTA 
정의화	중구 동구	새누리당	FTA 
나성린	진구 갑	새누리당	FTA    
서병수	해운대 기장 갑	새누리당	FTA 
하태경	해운대 기장 을	새누리당	
박형준	수영	무소속	

광주

명단은 지역구 순으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나의 지역구 의원을 찾아보세요!

심판 대상	지역구	정당	심판 사유
김동철	광산 갑	민주통합당	FTA
정용화	서구 갑	무소속	
이정현	서구 을	새누리당	FTA 
정남준	서구 을	무소속	

전남

명단은 지역구 순으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나의 지역구 의원을 찾아보세요!

심판 대상	지역구	정당	심판 사유
최인기	나주 화순	무소속	
김성곤	여수 갑	민주통합당	FTA

전북

명단은 지역구 순으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나의 지역구 의원을 찾아보세요!

심판 대상	지역구	정당	심판 사유
정운천	전주 완산 을	새누리당	
이명노	진안 · 무주 · 장수 · 임실	무소속	

강원

명단은 지역구 순으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나의 지역구 의원을 찾아보세요!

심판 대상	지역구	정당	심판 사유
권성동	강릉	새누리당	FTA
최연희	동해 삼척	무소속	
송훈석	속초 고성 양양	민주통합당	
한기호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새누리당	FTA
허 천	춘천	무소속	FTA
황영철	홍천 횡성	새누리당	

대전

명단은 지역구 순으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나의 지역구 의원을 찾아보세요!

심판 대상	지역구	정당	심판 사유
박성호	대덕	새누리당	

충남

명단은 지역구 순으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나의 지역구 의원을 찾아보세요!

심판 대상	지역구	정당	심판 사유
이인제	논산 계룡 금산	자유선진당	FTA
김호연	천안 을	새누리당	FTA
홍문표	홍성 예산	새누리당	

충북

명단은 지역구 순으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나의 지역구 의원을 찾아보세요!

심판 대상	지역구	정당	심판 사유
송광호	제천 단양	새누리당	FTA
정우택	청주 상당	새누리당	
노영민	청주 흥덕 을	민주통합당	
윤진식	충주	새누리당	FTA

비례대표

명단은 지역구 순으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나의 지역구 의원을 찾아보세요!

심판 대상	지역구	정당	심판 사유
박근혜		새누리당	FTA
전여옥		국민생각	FTA

19대 총선 후보 정보, 어디에 있을까?

이선미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음식의 원산지가 어딘지, 어째서 내 월급만 빼고 물가는 다 오르는지, 세계 2위를 기록하는 대학 등록금은 어디까지 치솟을 건지.

이 모든 것들이 법을 만드는 이들의 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요. 4년 임기의 국회,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영향력이 우리 삶을 뒤흔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치가 이토록 삶 곳곳에 침투해 있으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며 한 명 한 명의 대리인을 잘 뽑는 수밖에요.

그런데 많은 후보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할까요? 소속 정당, 인물, 공약 평가는 기본이지요. 한 걸음 더 나아가 후보자들을 꼼꼼히 뜯어보는 재미를 아는 유권자들을 위해, 19대 총선 후보자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소개합니다. 후보자의 이력과 공약은 물론, SNS 동향, 유권자들이 집적한 정당·후보자 정보와 의견까지, 여기 다 있습니다.

리멤버멤 <http://rememberthem.kr>



2012총선유권자네트워크(이하 총선넷)의 공식 사이트. 총선넷은 전국 1천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네트워크 협의체다. 리멤버멤은 한

미FTA 찬성 의원, 4대강 사업 찬성 의원, 예산안 날치기 처리 의원 등 잠시 잊고 있던 정치인들의 이름을 다시금 기억하게 한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소속 단체들이 제공하는 반민주적 정책 책임자 명단을 통해 후보자들의 행적을 확인할 수 있다.

열려라국회 <http://watch.peoplepower21.org>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운영하는 국회 감시 전문 사이트. 18대 의원 가운데 상당수가 19대 총선 후보자로 등록했으니 그들의 의정 활동 확인은 필수! 열려라국회에서는 18대 현역 의원들의 기본 정보와 검직 현황, 법안 투표 및 발의 현황, 재산 및 후원금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www.nec.go.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에서 '2012년 국회의원 선거 정보'를 조회하면 19대 총선 선거 일정과 후보자 명부를 확인할 수 있다. 후보자들의 직업·학력·경력 등 기본 정보, 정당별·직업별·학력별 후보자 통계, 각 지역구의 선거비용 제한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개표 완료 후 후보자별 득표 수, 정당별 득표 순위 등을 제공한다.

*지역구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인구와 읍·면·동 수에 따라 결정된다.

한겨레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http://2012vote.hani.co.kr>

한겨레 | 2012.4.11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한겨레신문사가 운영하는 선거 정보 종합 사이트. SNS에서의 정치 동향을 중점적으로 보여준다. 트위터에서 언급된 횟수에 따라 정당별 SNS 기상도를 보여주고 후보자 관련 트윗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된다. 격전지로 꼽히는 곳은 여론조사 결과를 그래프로 보여줘 한눈에 지지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9대 총선과 관련된 한겨레신문의 뉴스를 종합하여 제공한다.

당신이 만드는 선거, YOU <http://www.vote4u.kr>

당 신 이 만 드 는 선 거



경향신문사가 운영하는 소셜 선거 사이트로, 독특한 레

아아웃이 인상적이다. 후보자 기본 정보와 SNS에서 오가는 정치·선거 이슈를 볼 수 있고, 후보자와 유권자가 쌍방향으로 교류하는 점이 특징이다. 각 정당과 후보자의 트위터 점유율(언급된 비율)을 실시간으로 날짜별로 확인할 수 있고, 트위터 상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를 바탕으로 '이슈 캘린더'를 제공한다.

나는 후보다 <http://nahubo.co.kr>



CBS가 운영하는 선거 정보 공유 사이트. SNS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관심 후보자를 추천해서 키운다는 의미의 '물줄기'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후보자의 공약을 보고 유권자들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유권자들이 선호하는 공약을 순위별로 확인할 수 있다. 비교적 다양한 격전 현장 소식을 갈무리해두고 있다.

미디어다음 제19대 총선

http://media.daum.net/2012g_election

Daum 미디어다음

제19대 총선

포털 사이트 다음의 총선 정보 종합 사이트. 역대 총선 정당 득표율을 그래프로 보여주어 정당별 비례대표 의석 수 변화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SNS 맵'에서 해당 후보자가 언급된 횟수에 따라 영역 크기를 다르게 보여주고, '격전지' 메뉴에서는 SNS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구를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역구 후보자의 일자별 트윗 추이도 볼 수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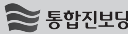
19대 총선, 이것이 문제다.

편집팀

분야	정책 과제	새누리당
경제/통상	한미FTA 폐기	반대 농축수산 부문, 중소기업·중소상인 등 피해 분야 보완 대책 추진
	비정규직 감축을 위한 사용사유제한 도입	입장 없음
	중소상인 적합업종 지정·고시 및 대기업의 진출 규제, 사업이양 강제	중소기업이 2/3이상 차지하는 업종에 대해 진출 규제 현행 당해 기업결합으로 5%이상의 시장점유율을 1%로 하향 조정
	재벌·대기업 불공정행위(담합, 하도급) 규제	하도급 부당단가인하에 대한 징벌적(3배) 손해배상제도 확대 도입 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한 집단소송제도 도입
	기존 감세 철회 및 한국판 버핏세(부자증세) 도입	정부의 법인세, 소득세 감세정책 철회 법인세, 소득세 최고세율구간 신설 반대
복지/노동	비급여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100만원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공공병원 30% 확충	비급여진료 건강보험 적용은 재정상황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추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는 중·장기과제로 신중히 접근 공공병원의 30% 물적확충은 신중해야 함
	국공립보육시설 30% 확충	국공립 어린이집은 적정 위치에 확보 민간보육시설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대상자 전체 노인으로 확대	신중한 검토 필요
	고교 무상의무교육 등록금 상한제를 통한 대학 반값등록금 실현	고교 무상의무교육은 단계적으로 추진 등록금 상한제 반대 (대학의 자구 노력 통해 실현)
	전월세 상한제 도입 공공임대주택 20%로 확대	일반적인 전월세 상한제 반대, 획일적 자의적 인상범위 규정 반대 2018년까지 임대주택 비율 12%(120만호) 달성
정치/사법	검찰개혁 (대검 중수부 폐지, 고비처 신설, 검사장 직선제 등)	입장 없음
	비례대표 의석수 대폭 확대 (지역구의 최고 1/2수준까지)	입장 없음
평화	남북공동선언 이행 및 교류협력 활성화 법제도 정비	입장 없음
	제주해군기지 공사 중단 및 전면 재검토	반대
	신규원전 건설 중단,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폐쇄	원자력 발전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고려할 때 가장 현실적인 대안 해당지역 주민들과 원자력 발전소 필요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대체 에너지 개발에 대한 지속적 노력 필요

『참여사회』는 '19대 총선에서 시민사회가 주목하는 정책의제' 중 15개를 골라 주요 원내 정당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새 국회가 구성되면 참여연대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과제들입니다. 투표 전에 꼭 확인해 보세요.

*각 정당의 입장은 선관위에 등록한 정책 공약과 공식 공약자료집, 언론 기사, 복지국가연석회의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 핵없는세상공동행동의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을 바탕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독소조항 폐기 위한 전면 재협상	반대 농어업 보완 대책으로 10조원을 추가 확보	한미FTA 폐기 찬성 내수경제 확대로 경제주권 확립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담합, 납품단가 부당인하, 일감몰아주기 등에 대한 규제 강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개정)	대통령 직속으로 '대중소기업 거래불공정 조정기구'(한시적)를 설립 불공정하도급 질서 훼손 방지	불공정거래 징벌적 손해배상제 (손해액의 3배) 및 납품원가 연동제 도입
정부의 법인세, 소득세 감세정책 철회 법인세, 소득세 최고세율구간 신설 찬성	정부의 법인세, 소득세 감세정책 철회 법인세, 소득세 최고세율구간 신설 찬성	정부의 법인세, 소득세 감세정책 철회 법인세, 소득세 최고세율구간 신설 찬성
찬성	비급여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찬성 의료비 100만원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반대 공공병원 30% 확충 찬성	찬성
국공립보육시설 30% 확충 찬성	국공립보육시설 30% 확충 찬성	국공립보육시설 30% 확충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상위 20%보다 우선 80% 계층에게 기초노령연금 15% 조기확대
찬성	고교 무상의무교육은 점진적으로 확대 등록금 상한제 찬성 (대학등록금 30% 인하)	찬성
전월세 상한제 찬성 (임대료 인상 연간 5% 이내, 2년에 최대 10% 이내) 공공임대주택 20%로 확대 찬성	전월세 상한을 자치단체 임대료조정위원회에서 자율로 결정 공공임대주택 10% 이상 확대	전월세 상한제 도입 찬성 공공임대주택 20%로 확대 찬성
대검 중수부 폐지 찬성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찬성 검경으로 구성된 독립적 지위와 수사권 가진 국가수사국 설치	입장없음	대검 중수부 폐지 찬성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찬성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비례대표제 확대	시도 인구 비례에 의해 선출되는 '지방대표원(가)'을 특별법으로 설치(지역발전과 관련된 예산 및 법안에 대한 승인권 부여) 헌법개정 이후 50여명으로 구성되는 상원 설치	독일식 정당명부비례제 도입 (지역-비례 1:1)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 이행 협의 착수 남북 주도의 평화협정 체결 논의 착수	입장 없음	남북 간 대화체제 복원 및 6.15, 10.4 선언 이행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조기달성을 위한 일괄타결 실현
즉각 중단, 19대 국회에서 공사계획 전면 재검토	반대	즉각 중단, 19대 국회에서 공사계획 전면 재검토
찬성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핵발전소 폐쇄 가동 중인 원전의 안전 규제와 투명성 강화 설계종료 원전 수명연장 반대	찬성 2050년까지 단계적으로 핵발전소 폐쇄 수명이 다한 원자력발전소 폐기 대체에너지 기반 확보 후 중장기적으로 원전 건설 축소·폐지	찬성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핵발전소 폐쇄 적극적 수요관리와 함께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5년 만에 만난, 유권자 자유

이선미 참여연대 의정감사센터 간사



유권자 자유를 꿈꾸는 유자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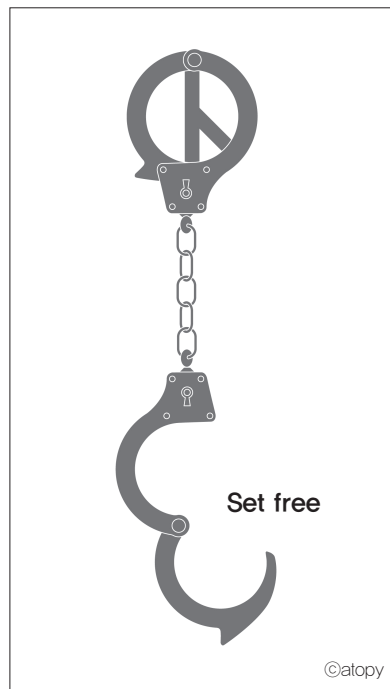
지난 2월 27일, 국회에서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 허용을 입법화했다. 2007년 9월 4일, 참여연대를 비롯한 6개 시민사회단체와 192명 네티즌이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래 5년만으로, 작년 12월 헌법재판소의 헌정위헌 결정 이후 두 달 가까이 지속되었던 위헌적 상태가 해소된 것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유권자들은 온라인 상에서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되었다. 끊임없이 자기 검열을 해야만 법망을 피해갈 수 있었던 '늑대 시대'에서 한 단계 나아간 것이다. 선거법 개정 내용에 여러 가지 미비점이 존재하지만, 온라인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진전된 점은 두 팔 벌려 환영할 일이다.

온라인 선거운동, 이제는 마음 편히!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과 참여에 대한 규제는 2000년 총선시민연대 활동 시기 이후 본격화되었고, 2007년부터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따른 인터넷 단속이 단행되었다. 지난 2007년 1월 대선을 앞두

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UCC물에 대한 운용기준'을 발표하며 광범위한 단속에 들어갔고, 이로 인해 온라인 공간에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매우 위축되었다. 이에 2007년 9월 4일,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6개 시민사회단체와 네티즌 192명은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또한 17대 국회에서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위한 법 개정을 위해 입법청원 등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했지만 이뤄지지 않았고, 2007년 대선과 관련한 인터넷 UCC물 88,000여 건이 삭제되었다.

18대 국회가 들어선 후에도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한 활동은 계속되었다. 특히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가 발표한 SNS 단속 방침은 시민들이 선거법 개정에 다시 나서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이후 2011년 6월, 52개 시민단체와 네티즌·시민들은 '유권자자유네트워크(유자넷)'를 결성하고 선거법 개정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진행했다. 유자넷은 트위터(@youjanet)를 통해 캠페인 소식을 알리고 선거법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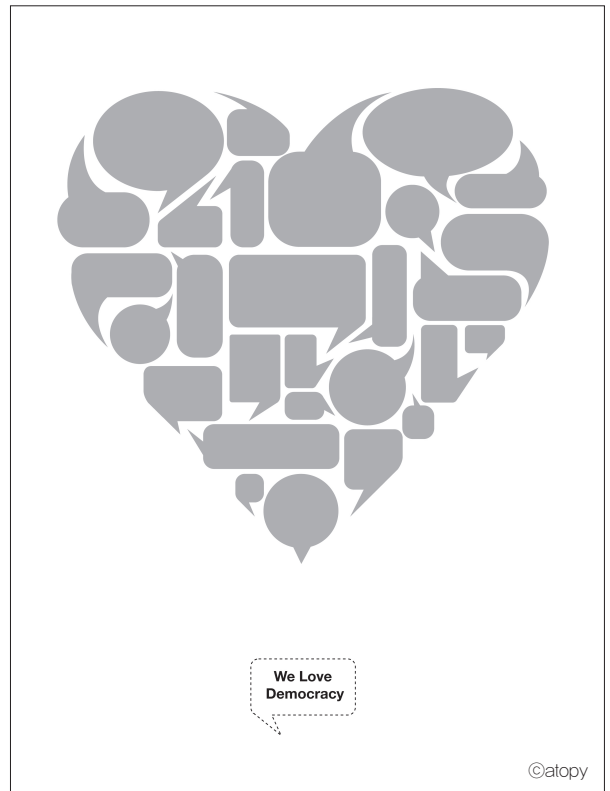


촉구 유권자 선언을 이어갔다. 또한 선거법 독소조항 17개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청원하고 의원발의(대표발의자 민주통합당 김부겸 의원)했다. 이와 함께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선거법 피해 시민들을 지원하였다.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 이후에는 2007년 피해 네티즌 재심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한 걸음 진전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열망하는 모든 시민들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다.

독소조항은 남아있다

그러나 이번 선거법 개정안은 제한적이며 우려되는 조항이 여전히 존재한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는 인터넷·SNS에서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반대로 선거당일은 제외되었다. 선거 당일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은 금지한다고 해도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을 금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선거 당일 투표 독려 운동을 정략적으로 판단해 제한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또한 후보자비방죄 조항도 온라인 선거운동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 ‘비방’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통해 사실상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비판과 평가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헌법으로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유권자들은 자유롭게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비판하고 정책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선거법은 서명운동, 집회, 사진전 등을 활용한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고 있다. 또한 정책·공약에 대한 단순 비교·평가는 가능하지만 정당별·후보자별 점수를 부여하거나 순위를 정하는 방법은 금지하고 있다. 정책 캠페인 과정에서도 해당 정책과 관련된 후보자와 정당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은 위법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규제 조항이 촘촘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정책을 요구할 수 있을까? ‘정책 선거’라는 말이 무색하다.

19대 국회의 과제, 포괄적인 선거법 개정

작은 물건 하나를 사기 위해서도 가격을 비교하고 장·단점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다. 하물며 나를 대리하는 사람을 선출하는 데 그러한 과정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18대 국회의 온라인 선거운동 상시 허용 입법화는 분명 환영할 일이지만 후보자비방죄 적용, 오프라인 정책 캠페인 단속 등 유권자 자유를 가로막는 독소조항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유권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선거법 개정에 특정 정당의 유불리가 들어설 자리는 없다. 곧 개원할 19대 국회는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유권자 권리가 완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선거법을 포괄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❸